

“여수폭발 용접 승인 절차 없었다”

경찰, 안전절차 무시 책임소재 규명 주력 대립산업 압수수색... 하도급 관행 수사도

여수국가산업단지내 대립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 폭발 사고가 부실한 안전 관리 등으로 빚어진 '인제'(人災)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도 대립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 폭발 사고 원인 및 산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했다.

1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용접 작업이 공식적인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립산업의 작업 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다른 점검 항목과는 달리, 용접

작업 승인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작업 확인서에 브러싱, 글라인팅, 드릴링 등 화기(火氣)작업의 경우 승인을 의미하는 표시가 됐지만 불꽃 발생작업은 공란으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 허가서는 작업 때마다 매번 가연성 가스, 질소 제거 여부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점검·확인한 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허가 권한은 발주처인 대립산업에 있다.

용접은 작업 시 그 대상이 되는 모재의 온도가 600~1000도까지 올라가 화기작업의 조건보다 훨씬 까다롭

다. 용접 작업에 대한 최종 승인 과정 없이 용접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립산업 측은 지난 1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일로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한 ‘화기 작업’을 저장탑 2층에서 진행하던 중 내부 분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립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18일 서면질의에 대한 대립산업 측 답변을 공개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 작업허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립산업 측은 지난해 6월 가스폭발 사고 뒤 산업안전감독 당국의 점검에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의무화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문 사실도 알려졌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립산업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모두 18건이 적발돼 9건은 개선했지만 나머지 9건은 개선되지 않아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여수경찰은 대립산업 여수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폭발 사고와 관련된 서류 확보에 나서는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도 18일부터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1인당 사망보험금 5억3천만원

‘여수참사’ 6명 오늘 장례

여수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6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장례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립산업과 유한기술에 따르면 대립산업과 유한기술, 유족 등은 이날 오전 사망 보험금을 5억3000여만원으로 합의했고 19일 오전 장례를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한기술은 대립산업과 하청 계약을 맺고 사고 발생 전 이들 6명을 직접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던 대립산업 협력사다. 3자는 앞서 사망자 1인당 위자료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기에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자는 또 장례 문제도 최종 타결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께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립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른다.

이어 주수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관련 행정사항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나원침 (8776)



전자발찌 부수고 도주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살인에 비호로 부각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망치로 부수고 도주한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밍크코트 사겠다” 속여 그림 훔쳐가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중고 밍크코트를 사겠다”고 속여 의재 허백련의 ‘화조(花鳥) 그림을 훔쳐간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7)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K아파트에 사는 이모(여·85)씨의 집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그림(2호·A4용지 1장 크기) 1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중고 의류·그림·귀금속 등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김씨는 이날 K아파트 노인실에서 우연히 만난 이씨가 중고 밍크코트를 팔겠다고 하자 따라 나섰는데, 경찰에서 “의재 허백련의 그림을 보고 순간 마음이 동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중학교 담임 7명중 1명 ‘기간제’

학생 생활지도 원활치 못해 학폭 발생 한 원인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1명가량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경우 더욱 심해 7명 중 1명 꼴이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기간제 교원은 2791명이었다. 이 중 32%인 916명이 학급 담임을 맡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39%로, 기간제 교사 5명 중 2명이 담임을 맡았다. 전남은 이보다 15%포인트 낮은 24%였다. 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



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지역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 547명 가운데 무려 307명(56.1%)이 담임을 맡았다. 이는 전체 담임교사 2050명 중 14.9%로, 7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고등학교는 574명 중 168명(29.3%), 초등학교는 343명 중 77명(22.4%)이 기간제 담임이었다.

광주지역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최근 2년 사이에 3배나 늘었다. 지난

2010년 208명, 2011년 446명, 2012년 617명으로 409명(196%)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은 정규 교원 수는 7487명에서 7045명으로 442명 줄었다.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0년 35.3%에서 39.4%로 높아졌다.

전남 기간제 교사의 담임 현황은 2010년 126명, 2011년 265명, 지난해 299명으로 2년 사이에 173명(137%) 늘었다. 전남지역도 중학교에서 기간제 담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0년 26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무려 269%(70%) 증가했다.

기간제 담임 교사의 급증 이유는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정규 교원 수는 2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수는 1134명에서 2791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이를 기간제 교사가 떠맡게 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구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깔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연합스



짚풀공예 배우는 원생들

광주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18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 짚풀공예체험학습장에서 어른들로부터 짚풀공예를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檢, 안도현 출두 요구에 누리꾼 비판

안중근 의사 유목 의혹 제기

지난해 12월10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도현(사진) 시인이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아 논란이다.

전주지검은 18일 진정이 들어와 피진정인 신분으로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 유목과 관련해 사

실 관계를 따져 묻는 일이 선거법 위반이라.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는 글을 남기며 검찰의 출두 요구 사실을 알렸다.

안 시인은 검찰의 출두 요구에 22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수사와로 출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게 무슨 죄가 되는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는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가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